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김 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승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with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 문의 : 경실련 정책국(김성달 국장, 정택수 부장, 서희원 간사 02-3673-2146)
- 시행 : 2022.8.3.(총 21매)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평균 부동산재산 23억 국민평균의 6배

- 조성명 강남구청장 부동산 재산 513억, 오피스텔·상가·건물·토지재산 최다보유
- 73명 중 47명(64%)은 다주택·상가건물·대지·농지 보유, 이해충돌여부 검증해야
- 19명(26%)은 가족 34명 재산 고지거부하여 재산은닉여부 알 수 없어

임대용 부동산 보유했다면 즉각 처분하고, 지역주민 위한 시도행정에 전념하라!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 취지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
- ◆ 입장 발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약>

경실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조사자료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이며, 이중 73명 당선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이다.

조사결과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더불어민주당 10.5억이다. 국민의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거의 3배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서울기초단체장, 경기기초단체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서울기초단체장 38억, 광역단체장 23억, 경기기초단체장 11억 순으로 서울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다.

[표 1] 당선자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단위 : 백만 원)

기준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전체 재산신고액)

| 당선자 | 지역구 | 정당 | 총 재산신고액 | 부동산재산 | | | 부동산재산 비중 |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채무) |
|--|-----------|------------|------------|--------|--------|--------|-------------|------------------------|
| | | | | 소계 | 건물 | 토지 | | |
| 조성명 ¹⁾ | 서울 강남구 | 국민의힘 | 51,902 | 51,287 | 35,205 | 16,082 | 99% | -15,042 |
| 박강수 | 서울 마포구 | 국민의힘 | 5,997 | 7,236 | 5,443 | 1,793 | 121% | -3,493 |
| 김영환 | 충청 북도 | 국민의힘 | 539 | 6,568 | 5,912 | 656 | 1218% | -6,483 |
| 박형준 | 부산 광역시 | 국민의힘 | 4,684 | 5,748 | 5,494 | 254 | 123% | -2,166 |
| 문헌일 | 서울 구로구 | 국민의힘 | 3,098 | 3,774 | 3,774 | - | 122% | -1,226 |
| 오세훈 | 서울 특별시 | 국민의힘 | 5,902 | 3,749 | 3,615 | 134 | 64% | -1,300 |
| 이상일 | 경기 용인시 | 국민의힘 | 4,319 | 3,084 | 3,084 | - | 71% | -500 |
| 류경기 | 서울 중랑구 | 더불어 민주당 | 3,176 | 3,028 | 2,964 | 64 | 95% | -492 |
| 박희영 | 서울 용산구 | 국민의힘 | 2,540 | 3,017 | 2,584 | 433 | 119% | -1,140 |
| 홍준표 | 대구 광역시 | 국민의힘 | 3,893 | 3,014 | 3,014 | - | 77% | -300 |
| 상위 10명 평균 | | | 8,605 | 9,051 | 7,109 | 1,942 | 105% | -3,128 |
| 전체평균 (73명) | | | 2,471 | 2,308 | 1,931 | 377 | 93% | -752 |
|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2배 수준 ²⁾ | | | | | | | | |

1)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신고한 총 재산은 519억2백만원이지만 항목별 소계의 합은 519억1천8백만원으로 불일치함.

2)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은 36,708만 원(2021.12)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건물 352억, 토지 160.8억 등 부동산 재산만 총 512.9억을 신고했다. 512.9억은 당선자 73명의 총 부동산 재산 1,685억의 30%이며, 상위 9명의 부동산 재산 392억보다 120억이 더 많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나열하면 박강수 마포구청장 72.4억, 김영환 충북도지사 65.7억, 박형준 부산시장 57.5억, 문헌일 구로구청장 37.7억, 오세훈 서울시장 37.5억, 이상일 용인시장 30.8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30.3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30.2억, 홍준표 대구시장 30.1억 순이다. 부동산 재산 최다보유 10명 중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제외한 9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73명 중 국민평균 부동산재산(3.7억) 수준인 4억원 이하를 소유한 단체장은 5명(6.8%)에 불과했으며, 무주택자는 9명(12.3%)에 그쳤다.

본인·배우자 신고 재산 기준 다주택자는 총 15명이다. 주택 3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서태원 가평시장 등 2명이다. 주택 2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서강석 송파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경희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13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택과 오피스텔 재산으로 총 57.7억을 신고했다. 강남 도곡동 아파트 1채와 고양시 일산서구, 강원 속초에 오피스텔 39채 등 총 40채를 신고했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면 40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과 같다.

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 재산 신고 현황을 조사했다.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총 20명이며 재산액은 505억이다.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상가, 건물 등 총 34채, 285.3억의 비주거용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의 재산도 73명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많이 신고한 당선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45.7억(3채), 박강수 마포구청장 42.6억(1채), 박형준 부산시장 32.3억(3채), 유정복 인천시장 17.6억(1채), 백경현 구리시장 13.1억(1채), 이순희 강북구청장 11.6억(1채), 박희영 용산구청장 11.3억(1채), 이장우 대전시장 11.1억, 백영현 포천시장 5.5억(1채) 등이다. 비주거용 건물재산 신고 상위 10명 중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제외한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40명이며, 총 234억의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대지 64.3억(8,085㎡), 임야 33.7억(82,694㎡), 농지 28.9억(85,874㎡), 도로·제방 등 기타 토지를 1.1억(3,069㎡) 등 128.1억(179,721㎡)의 토지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토지재산이 많은 당선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17.1억, 주광덕 남양주시장 13.5억, 백영현 포천시장 7.8억, 김영환 충북도지사 6.5억, 백경현 구리시장 5.7억, 김덕현 연천군수 5.1억, 서태원 가평시장 4.9억,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4.4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4.3억 등이다. 토지재산 보유 상위 10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모두 23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서태원 가평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전진선 양평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총 19명의 당선자는 가족 3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명이며, 고지 거부 이유는 독립생계이다. 가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형훈 제주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족 2명의 재산을 고지거부했으며,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희 강동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가족 1명의 재산을 고지거부했다.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주택 1채, 상가 1채, 토지 447㎡ 등 72.3억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25.1억, 오세훈 서울시장 24.6억, 홍준표 대구시장 23.9억, 김진태 강원도지사 23.8억,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22.4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16.8억, 전성수 서초구청장 15.5억, 김동연 경기도지사 14.5억, 김경희 이천시장 13.4억 상당의 부동산 재산이 강남 3구에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강남 3구에 주택 1채씩을 신고했으며,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택 외에 오피

스텔 1채를 더 신고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본인 지역구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등은 지역구가 아닌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집값이 잡히려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집값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집값안정을 위한 단체장들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평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들이 집값 안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부동산 실사용 여부 밝히고 임대용 부동산 즉시 매각하라!

둘째, 각 정당은 공천기준 강화하여 사업가가 아닌 국민 위한 일꾼을 공천하라!

셋째, 재산은닉 위한 고지거부 폐지하고 축소없이 사실대로 공개하라!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살림을 맡게 된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실사용하지 않는 모든 부동산 재산을 매각하여 부동산으로 사적이윤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집값 잡는 정책도 활발히 논의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계속적으로 드러내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정책선거·공천선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 시민캠페인 등의 다양한 운동을 전개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는 거대 양당의 투명한 공천 과정을 통하여 자질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진실로 지역을 위하여 일할 일꾼이 당선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자 연속기획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을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 두 번째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세 번째는 당선자 전체의 재산분석 등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17명과 서울·경기 기초자치단체장 56명 등 73명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분석했다.

자치단체장들의 부동산 재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30평형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억 정도였는데, 5년 동안 6.8억(113%)이 올라 12.8억이 됐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대도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어디에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경실련은 집값 잡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에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부동산 재산이 많을수록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통해 사적이윤을 취하던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집값 잡는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선출직 단체장들이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 상가,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지역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경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56명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드러내고, 이들에게 무주택서민 등 지역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과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처분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명부 기준

○ 조사대상 총 73명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 정의당, 무소속 당선인 없음)

[표 1] 조사대상 개요

| 소속 | 의원 수 | 비고 |
|--------|------|--|
| 국민의힘 | 53 | 광역자치단체장 : 12명, 서울 구청장 : 17명, 경기기초단체장 : 24명 |
| 더불어민주당 | 20 | 광역자치단체장 : 5명, 서울 구청장 : 8명, 경기기초단체장 : 7명 |
| 계 | 73 | 광역자치단체장 : 17명, 서울 구청장 : 25명, 경기기초단체장 : 31명 |

□ 조사자료

○ 2022년 5월 1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 조사내용

○ 당선자 신고 재산 및 부동산재산 현황(본인·배우자·직계가족)

○ 당선자의 주택, 오피스텔,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재산, 강남 3구 보유현황(본인·배우자)

○ 고지거부 내역

3. 분석결과

1)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8억 vs 더불어민주당 11억

[표 2] 정당별 당선자 부동산 재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준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전체 신고액)

| 구분 | 당선자수 (A) | 총 재산 (B) | 부동산재산 (C) | 부동산재산 비중 (C/B) | 1인당 | |
|-----------|-------------|-------------|--------------|----------------------|-------------|--------------|
| | | | | | 재산 (B/A) | 부동산 (C/A) |
| 국민의힘 | 53 | 148,947 | 147,497 | 99% | 2,810 | 2,783 |
| 더불어민주당 | 20 | 31,399 | 21,006 | 67% | 1,570 | 1,050 |
| 당선자 73명 계 | | 180,346 | 168,503 | 93% | 2,471 | 2,308 |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서울·경기 기초자치단체장 56명(이하 당선자) 등 당선자 73명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등이다.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더불어민주당 10.5억이다. 국민의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거의 3배 수준이다. 당선자의 총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3%인데, 국민의힘 당선자는 99%,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6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당선자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 단체장 당선자별 부동산 재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준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전체 신고액)

| 구분 | 당선인수 (A) | 총 재산 (B) | 부동산재산 (C) | 부동산재산 비중 (C/B) | 1인당 | |
|------------|-------------|-------------|--------------|----------------------|-------------|--------------|
| | | | | | 재산 (B/A) | 부동산 (C/A) |
| 광역단체장 | 17 | 40,826 | 39,147 | 96% | 2,402 | 2,303 |
| 서울단체장 | 25 | 97,378 | 95,615 | 98% | 3,895 | 3,825 |
| 경기단체장 | 31 | 42,142 | 33,741 | 80% | 1,359 | 1,088 |
| 당선인 73명 합계 | | 180,346 | 168,503 | 93% | 2,471 | 2,308 |

광역시자치단체장, 서울기초단체장, 경기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비교했다.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서울기초단체장 38억, 광역단체장 23억, 경기기초단체장 11억 순으로 서울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지역의 단체장이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한 사실이다. 전체 재산 대비 부동산 재산 비중도 서울기초단체장 98%, 광역단체장 96%, 경기기초단체장 80% 순으로 나타나 부동산 재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재산 비중도 크게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4억 이하 5명, 4억~10억 이하 25명, 10억~30억 이하 33명, 30억~50억 이하 6명, 50억~100억 이하 3명, 100억 이상 1명으로 국민평균(3.7억) 수준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단체장은 5명(전체의 6.8%)에 불과했다.

2) 부동산재산 최고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512.9억, 2위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72.4억

[표 4] 당선자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단위 : 백만 원
기준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전체 재산신고액)

| 당선자 | 지역구 | 정당 | 총 재산신고액 | 부동산재산 | | | 부동산재산 비중 |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채무) |
|--|-----------|------------|------------|--------|--------|--------|-------------|------------------------|
| | | | | 소계 | 건물 | 토지 | | |
| 조성명 ³⁾ | 서울 강남구 | 국민의힘 | 51,902 | 51,287 | 35,205 | 16,082 | 99% | -15,042 |
| 박강수 | 서울 마포구 | 국민의힘 | 5,997 | 7,236 | 5,443 | 1,793 | 121% | -3,493 |
| 김영환 | 충청 북도 | 국민의힘 | 539 | 6,568 | 5,912 | 656 | 1218% | -6,483 |
| 박형준 | 부산 광역시 | 국민의힘 | 4,684 | 5,748 | 5,494 | 254 | 123% | -2,166 |
| 문헌일 | 서울 구로구 | 국민의힘 | 3,098 | 3,774 | 3,774 | - | 122% | -1,226 |
| 오세훈 | 서울 특별시 | 국민의힘 | 5,902 | 3,749 | 3,615 | 134 | 64% | -1,300 |
| 이상일 | 경기 용인시 | 국민의힘 | 4,319 | 3,084 | 3,084 | - | 71% | -500 |
| 류경기 | 서울 중랑구 | 더불어 민주당 | 3,176 | 3,028 | 2,964 | 64 | 95% | -492 |
| 박희영 | 서울 용산구 | 국민의힘 | 2,540 | 3,017 | 2,584 | 433 | 119% | -1,140 |
| 홍준표 | 대구 광역시 | 국민의힘 | 3,893 | 3,014 | 3,014 | - | 77% | -300 |
| 상위 10명 평균 | | | 8,605 | 9,051 | 7,109 | 1,942 | 105% | -3,128 |
| 전체평균 (73명) | | | 2,471 | 2,308 | 1,931 | 377 | 93% | -752 |
|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2배 수준 ⁴⁾ | | | | | | | | |

3)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신고한 총 재산은 519억2백만원이지만 항목별 소계의 합은 519억1천8백만원으로 불일치함.

당선자 73명이 신고한 총재산 기준,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이다. 부동산 재산 중 건물 재산이 19억, 토지 재산은 4억이다. 1인 평균 총 재산액이 25억인데 그 중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3%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건물 352억, 토지 160.8억 등 부동산 재산만 총 512.9억을 신고했다. 512.9억은 당선자 73명의 총 부동산 재산 1,685억의 30%이며, 상위 9명의 부동산 재산 392억보다 120억이 더 많다. 조성명 구청장은 부채도 무려 150억이나 되는데 이 또한 73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총 재산액과 세부내역 합계액이 다르게 신고됐다. 선관위가 재산신고내역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나열하면 박강수 마포구청장 72.4억, 김영환 충북도지사 65.7억, 박형준 부산시장 57.5억, 문헌일 구로구청장 37.7억, 오세훈 서울시장 37.5억, 이상일 용인시장 30.8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30.3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30.2억, 홍준표 대구시장 30.1억 순이다. 부동산 재산 최다보유 10명 중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제외한 9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위 10명 중 총재산 대비 부동산 재산의 비율이 100%를 넘는 당선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121%, 김영환 충북도지사 1,218%, 박형준 부산시장 123%, 문헌일 구로구청장 122%, 박희영 용산시장 119%이다.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총재산 신고액이 5억인데 부동산 재산이 66억, 채무가 65억이나 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라면 과도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지역구별로는 서울기초단체장 5명, 서울 광역단체장 1명, 대구·부산·충북 광역단체장 3명, 경기기초단체장 1명 등으로 서울 지역구 당선자의 부동산 재산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민 평균보다 부동산 재산이 적은 당선자는 김경일 파주시장 1.1억, 강수현 양주시장 2.1억, 정장선 평택시장 2.3억, 박형덕 동두천시장 3.4억 등 4명에 불과하다. 국민평균 이상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집 없는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은 36,708만 원(2021.12)

3) 다주택 보유 15명, 조성명 구청장 강남 아파트 1채, 오피스텔 39채 보유

[표 5] 다주택 보유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준 : 본인, 배우자 재산신고액/ 팔호 안은 보유 수)

| 당선자 | 지역구 | 정당 | 주택 | | | | 오피스텔 | 총계 |
|------------------------|---------|------|------------|----|--------|----|------|-----|
| | | | 아파트 | 단독 | 연립/다세대 | 소계 | | |
| 이성현 | 서울 서대문구 | 국민의힘 | 1 | 2 | - | 3 | - | 3 |
| 서태원 | 경기 가평시 | 국민의힘 | 1 | 1 | 1 | 3 | - | 3 |
| 문헌일 | 서울 구로구 | 국민의힘 | 2 | - | - | 2 | 1 | 3 |
| 정문헌 | 서울 종로구 | 국민의힘 | - | 2 | - | 2 | - | 2 |
| 김진태 | 강원도 | 국민의힘 | 2 | - | - | 2 | - | 2 |
| 서강석 | 서울 송파구 | 국민의힘 | 1 | 1 | - | 2 | - | 2 |
| 김태우 | 서울 강서구 | 국민의힘 | 2 | - | - | 2 | - | 2 |
| 김경희 | 경기 이천시 | 국민의힘 | 2 | - | - | 2 | - | 2 |
| 최민호 | 세종시 | 국민의힘 | 1 | 1 | - | 2 | - | 2 |
| 김병수 | 경기 김포시 | 국민의힘 | 2 | - | - | 2 | 1 | 3 |
| 김성제 | 경기 의왕시 | 국민의힘 | 1 | 1 | - | 2 | - | 2 |
| 김태흠 | 충청남도 | 국민의힘 | - | 2 | - | 2 | - | 2 |
| 이동환 | 경기 고양시 | 국민의힘 | 1 | 1 | - | 2 | - | 2 |
| 이충우 | 경기 여주시 | 국민의힘 | 1 | 1 | - | 2 | - | 2 |
| 이철우 | 경상북도 | 국민의힘 | 2 (분양권) | - | - | 2 | - | 2 |
| 15명 계 | | | 19 | 12 | 1 | 32 | 2 | 34 |
| 조성명 강남구청장 보유 주택 및 오피스텔 | | | 1 | - | - | 1 | 39 | 40 |
| 주택 오피스텔 보유 64명 | | | 61 | 15 | 4 | 80 | 48 | 128 |

본인·배우자 신고 재산 기준 다주택자는 총 15명이다. 주택 3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서태원 가평시장 등 2명이다. 주택 2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서강석 송파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13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택과 오피스텔 재산은 총 57.7억이나 신고했다. 강남 도곡동 아파트 1채와 고양시 일산서구, 강원 속초에 오피스텔 39채 등 총 40채를 신고했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면 40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과 같다.

당선자들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 등 실사용 목적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을 펴기란 매우 어렵다. 당선자들은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은 하루속히 매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도정에 전념해야 한다.

4) 상가 등 비주거 건물보유 20명, 실사용 여부 밝히고 임대사업용은 즉시 처분해야

[표 6] 비주거용 건물 신고 상위 10명

(단위 : 백만 원)

기준: 본인, 배우자 재산신고액 / 괄호 안은 보유 수)

| 당선자 | 지역구 | 정당 | 상가 (점포, 근생시설 등) | 빌딩 | 사무실 | 기타 | 계 |
|-----------------------|---------|---------|--------------------|--------------|--------------|--------------|----------------|
| 조성명 | 서울 강남구 | 국민의힘 | 26,488 (29) | - | - | 2,041 (5) | 28,529 (34) |
| 김영환 | 충청북도 | 국민의힘 | 4,572 (3) | - | - | - | 4,572 (3) |
| 박강수 | 서울 마포구 | 국민의힘 | - | 4,267 (1) | - | - | 4,267 (1) |
| 박형준 | 부산 광역시 | 국민의힘 | 575 (1) | - | 2,654 (2) | - | 3,229 (3) |
| 유정복 | 인천 광역시 | 국민의힘 | 1,760 (1) | - | - | - | 1,760 (1) |
| 백경현 | 경기도 구리시 | 국민의힘 | 1,313 (1) | - | - | - | 1,313 (1) |
| 이순희 | 서울 강북구 | 더불어 민주당 | - | 1,161 (1) | - | - | 1,161 (1) |
| 박희영 | 서울 용산구 | 국민의힘 | - | - | - | 1,137 (1) | 1,137 (1) |
| 이장우 | 대전 광역시 | 국민의힘 | 1,110 (1) | - | - | - | 1,110 (1) |
| 백영현 | 경기 포천시 | 국민의힘 | - | - | - | 554 (1) | 554 (1) |
| 상위 10명 계 (신고 건물 수) | | | 35,818 (36) | 5,428 (2) | 2,654 (2) | 3,732 (7) | 47,632 (47) |
| 비주거용 건물 신고 20명 계 | | | 37,581 (44) | 5,771 (4) | 2,828 (3) | 4,285 (9) | 50,465 (60) |

* 주 : 기타 - 건물, 공장, 창고 등

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 재산 신고 현황을 조사했다.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총 20명이며 재산액은 505억이다. 상가재산이 376억(44채)으로 가장 많으며, 빌딩 58억(4채), 사무실 28억(3채), 공장·창고 등 기타 건물이 43억(9채)이다. 재산의 종류를 건물이라고 명기하여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기타로 분류했다.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28채, 강남구 역삼동에 1채 등 상가재산만 264.8억(29채),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에 건물재산 20.4억(5채) 등 총 285.3억의 건물재산을 신고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의 재산도 당선자 중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비주거용 건물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많이 신고한 당선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45.7억(3채), 박강수 마포구청장 42.6억(1채), 박형준 부산시장 32.3억(3채), 유정복 인천시장 17.6억(1채), 백경현 구리시장 13.1억(1채), 이순희 강북구청장 11.6억(1채), 박희영 용산구청장 11.3억(1채), 이장우 대전시장 11.1억, 백영현 포천시장 5.5억(1채) 등이다. 비주거용 건물재산 신고 상위 10명 중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제외한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비주거용 건물은 생계유지 수단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들은 건물에 대한 실사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만큼 즉각 처분하고 지역민을 위한 시도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토지보유 40명 중 농지보유 23명 실제 경작 여부와 취득과정 철저히 검증해야

[표 7] 토지 재산 신고 상위 10명

(단위: 백만 원,
기준: 본인, 배우자 / 괄호 안은 토지면적 m²)

| 당선자 | 지역구 | 정당 | 농지 (전답, 과수원 등) | 임야 | 대지 | 기타 | 계 |
|--|------------|------|--------------------|--------------------|-------------------|----------------|---------------------|
| 조성명 | 서울 강남구 | 국민의힘 | 2,898 (85,874) | 3,371 (82,694) | 6,430 (8,085) | 111 (3,069) | 12,810 (179,721) |
| 박강수 | 서울 마포구 | 국민의힘 | - | 1,657 (95,889) | 49 (15) | - | 1,706 (95,904) |
| 주광덕 | 경기 남양주시 | 국민의힘 | 1,343 (2,185) | 9 (34,482) | - | - | 1,352 (36,667) |
| 백영현 | 경기 포천시 | 국민의힘 | 739 (10,949) | 43 (515) | - | 0.11 (82) | 782 (84,441) |
| 김영환 | 충청북도 | 국민의힘 | 196 (10,226) | 460 (74,133) | 0.25 (82) | - | 656 (84,441) |
| 백경현 | 경기 구리시 | 국민의힘 | - | 577 (17,040) | - | - | 577 (17,040) |
| 김덕현 | 경기 연천군 | 국민의힘 | 336 (5,837) | - | 169 (324) | - | 505 (6,161) |
| 서태원 | 경기 가평시 | 국민의힘 | 323 (6,051) | 80 (9,025) | 87 (1,413) | 3 (129) | 493 (16,618) |
| 이성현 | 서울 서대문구 | 국민의힘 | 63 (7,438) | - | 375 (129) | - | 438 (7,567) |
| 박희영 | 서울 용산구 | 국민의힘 | - | 269 (36,929) | - | 165 (3,147) | 434 (40,076) |
| 상위 10명 합계 (신고 면적, 단위 : m ²) | | | 5,898 (128,560) | 6,466 (350,707) | 7,110 (10,048) | 279 (6,353) | 19,753 (495,666) |
| 40명 총계 | | | 7,572 (172,140) | 7,602 (514,084) | 7,820 (68,865) | 392 (7,140) | 23,386 (762,228) |

* 주 : 기타 - 도로, 묘지, 제방 등

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기준으로 토지 재산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40명이며, 총 234억의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액 기준으로 대지가 78.2억, 임야가 76억, 농지가 75.7억, 기타가 3.9억 순으로 많으며, 면적을 기준으로 임야 51만m², 농지 17만m², 대지가 7만m², 기타가 7천m² 순으로 많다.

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대지 64.3억(8,085㎡), 임야 33.7억(82,694㎡), 농지 28.9억(85,874㎡), 도로·제방 등 기타 토지를 1.1억(3,069㎡) 등 128.1억(179,721㎡)의 토지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토지재산이 많은 당선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17.1억, 주광덕 남양주시장 13.5억, 백영현 포천시장 7.8억, 김영환 충북도지사 6.5억, 백경현 구리시장 5.7억, 김덕현 연천군수 5.1억, 서태원 가평시장 4.9억,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4.4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4.3억 등이다. 토지재산 보유 상위 10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타났다.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서 이미 주택이나 상가 등이 지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총 15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박형준 부산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서태원 가평시장, 전진선 양평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이다. 대지를 활용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실시 여부,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신고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표 7] 농지 재산 1000㎡ 이상 신고 상위 10명

(단위: 백만 원,
기준: 본인, 배우자)

| 당선자 | 지역구 | 정당 | 토지면적 | 신고액 |
|------------------|---------|--------|----------|-------|
| 조성명 | 서울 강남구 | 국민의힘 | 85,874㎡ | 2,898 |
| 백영현 | 경기 포천시 | 국민의힘 | 10,949㎡ | 739 |
| 김영환 | 충청북도 | 국민의힘 | 10,226㎡ | 196 |
| 이성현 | 서울 서대문구 | 국민의힘 | 7,438㎡ | 63 |
| 박완수 | 경상남도 | 국민의힘 | 6,133㎡ | 119 |
| 서태원 | 경기 가평시 | 국민의힘 | 6,051㎡ | 323 |
| 김덕현 | 경기 연천군 | 국민의힘 | 5,837㎡ | 336 |
| 이승로 | 서울 성북구 | 더불어민주당 | 5,215㎡ | 65 |
| 김경희 | 경기 이천시 | 국민의힘 | 4,628㎡ | 154 |
| 김태흠 | 충청남도 | 국민의힘 | 4,494㎡ | 61 |
| 10명 계 | | | 146,845㎡ | 4,954 |
| 1000㎡이상 보유 23명 계 | | | 170,734㎡ | 7,440 |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서는 안 되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모두 23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서태원 가평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전진선 양평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6) 당선자 19명 가족 34명 재산 고지거부, 재산 은닉여부 알 수 없어

[표 9] 가족재산 고지거부 현황

| 당선자 | 소속 | 정당 | 본인과의 관계 | | | | 고지거부 유형 |
|--------------|----------|---------|---------|----|----|----|----------------------------------|
| | | | 부모 | 자녀 | 기타 | 계 | |
| 조성명 | 서울 강남구 | 국민의힘 | 2 | 2 | - | 4 | • 독립생계 |
| 박희영 | 서울 용산구 | 국민의힘 | 2 | 2 | - | 4 | • 독립생계 |
| 이필형 | 서울 동대문구 | 국민의힘 | 1 | 2 | - | 3 | • 피부양자 미해당(모) • 독립생계 |
| 박완수 | 경상남도 | 국민의힘 | - | 2 | 1 | 3 | • 독립생계(장남, 차남) • 피부양자 미해당(손녀) |
| 이철우 | 경상북도 | 국민의힘 | - | 1 | 1 | 2 | • 독립생계 |
| 오영훈 | 제주 특별자치도 | 더불어 민주당 | 2 | - | - | 2 | • 독립생계 |
| 김영환 | 충청북도 | 국민의힘 | - | 2 | - | 2 | • 독립생계 |
| 김두겸 | 울산광역시 | 국민의힘 | - | 2 | - | 2 | • 독립생계 |
| 홍준표 | 대구광역시 | 국민의힘 | - | 2 | - | 2 | • 독립생계 |
| 정원오 | 서울 성동구 | 더불어 민주당 | 1 | - | - | 1 | • 독립생계 |
| 김동연 | 경기도 | 더불어 민주당 | 1 | - | - | 1 | • 독립생계 |
| 이수희 | 서울 강동구 | 국민의힘 | 1 | - | - | 1 | • 독립생계 |
| 오승록 | 서울 노원구 | 더불어 민주당 | - | 1 | - | 1 | • 독립생계 |
| 김영록 | 전라남도 | 더불어 민주당 | - | 1 | - | 1 | • 독립생계 |
| 박형준 | 부산광역시 | 국민의힘 | - | 1 | - | 1 | • 독립생계 |
| 김관영 | 전라북도 | 더불어 민주당 | 1 | - | - | 1 | • 독립생계 |
| 유정복 | 인천광역시 | 국민의힘 | - | 1 | - | 1 | • 독립생계 |
| 서강석 | 서울 송파구 | 국민의힘 | - | 1 | - | 1 | • 독립생계 |
| 오세훈 | 서울특별시 | 국민의힘 | 1 | - | - | 1 | • 피부양자 미해당 |
| 고지거부 당선자 19명 | | | 12 | 20 | 2 | 34 | |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자 일부 공직자들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대외적으로는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자녀나 부모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광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을 받았으나 가족재산 고지거부로 은폐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했다.

조사결과 총 19명의 당선자가 가족 3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명이며, 고지거부 이유는 독립생계이다. 가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이필형 등

대문구청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형훈 제주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족 2명의 재산을 고지거부했으며,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희 강동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가족 1명의 재산을 고지거부했다.

가족재산의 고지거부가 재산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선관위와 권익위의 엄격한 심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

7) 당선자 10명 강남 3구에 부동산 재산 보유, 4명은 비서울 지역구

[표 10] 강남 3구 부동산 재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준 : 본인, 배우자 재산신고액 / 괄호 안은 보유 수)

| 당선자 | 지역구 | 소속정당 | 강남3구 | | | | |
|-----|---------|---------|--------|----------------|------------|----------|-------------------------------|
| | | | 가액 | 주택 (보유 수) | 오피스텔 | 비주거용건물 | 토지 (보유면적) |
| 조성명 | 서울 강남구 | 국민의힘 | 7,237 | 2,090 (1) | - | 9 (1) | 5,138 (447m ²) |
| 이상일 | 경기 용인시 | 국민의힘 | 2,506 | 2,506 (1) | - | - | - |
| 오세훈 | 서울 특별시 | 국민의힘 | 2,465 | 2,465 (1) | - | - | - |
| 홍준표 | 대구 광역시 | 국민의힘 | 2,394 | 2,394 (1) | - | - | - |
| 김진태 | 강원도 | 국민의힘 | 2,386 | 2,386 (1) | - | - | - |
| 이필형 | 서울 동대문구 | 국민의힘 | 2,238 | 2,238 (1) | - | - | - |
| 류경기 | 서울 중랑구 | 더불어 민주당 | 1,687 | 1,687 (1) | - | - | - |
| 전성수 | 서울 서초구 | 국민의힘 | 1,554 | 1,401 (1) | 153 (1) | - | - |
| 김동연 | 경기도 | 더불어 민주당 | 1,454 | 1,454 (1) | - | - | - |
| 김경희 | 경기 이천시 | 국민의힘 | 1,337 | 1,337 (1) | - | - | - |
| 합계 | | | 25,258 | 19,958 (10) | 153 (1) | 9 (1) | 5,138 (447m ²) |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전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싸다. 집값 상승폭도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투기꾼들은 뚝뚝한 한 채를 마련한다며 강남 부동산을 적극 구입하기도 한다. 당선자들의 강남 3구 부동산 재산 신고 현황은 어떠한지 조사했다.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주택 1채, 상가 1채, 토지 447m² 등 72.3억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25.1억, 오세훈 서울시장 24.6억, 홍준표 대구시장 23.9억, 김진태 강원도지사 23.8억, 이필형 동대문구

청장 22.4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16.8억, 전성수 서초구청장 15.5억, 김동연 경기도지사 14.5억, 김경희 이천시장 13.4억 상당의 부동산 재산이 강남 3구에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강남 3구에 주택 1채씩을 신고했으며,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택 외에 오피스텔 1채를 더 신고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본인 지역구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등은 서울이 지역구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4. 결론

집값은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개발·재건축과 건설사업 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집값이 잡히려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집값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집값안정을 위한 단체장들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평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오히려 상당수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이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닌 불로소득 사유화를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실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중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인 사람은 거의 없다.

이번 조사 결과로 민선 8기 당선자들은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6배가 넘는 2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들이 집값 안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부동산 실사용 여부 밝히고 임대용 부동산 즉시 매각하라!

경실련은 청와대, 장차관,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부동산 재산의 3~4배 정도 보유하고 있고, 상당수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편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광역 및 서울경기 단체장들이 국민평균 6.2배나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73명 중 64%에 해당하는 47명은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빌딩·대지·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재산의 상

당 부분은 실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보다 임대사업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들의 모습은 자치단체장인지 부동산 사업자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주민들은 시도정에 전념을 다할 수 있는 단체장을 선출한 것이지 사업자를 선출한 것이 아니다. 당선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사용 여부를 밝히고 임대가 목적이 라면 즉시 매각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각 정당은 공천기준 강화하여 사업가가 아닌 국민 위한 일꾼을 공천하라!

경실련은 6.1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각 정당에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제안했다. 거대양당은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국민 평균 재산보유액을 훨씬 넘는 부자들이 대거 공천된 것으로 볼 때 각 정당들이 실제로 엄격한 부적격 배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의심된다.

각 정당은 개인적인 사심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엄격한 공천기준을 세워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부자는 철저히 배제하고 깨끗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각 정당은 자질 없는 후보를 공천하여 지역일꾼을 원하였던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공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셋째, 재산은닉 위한 고지거부 폐지하고 축소없이 사실대로 공개하라!

공직자 재산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일부 당선자는 재산액과 세부내역 합계액이 다르게 신고됐으며, 부동산 면적이 누락되는 등 당국의 관리는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신고제도의 가장 큰 허점이라 할 수 있는 가족재산의 고지거부는 재산은닉의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관리 상황으로 볼 때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확한 공직자 재산신고를 지속하기 위해 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 시절 등록한 재산공개내역을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 불성실이나 허위공개 여부에 대해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을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산등록대상도 더 확대해야 한다. 주소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와 시세를 같이 기재하도록 하여 정확한 재산 현황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야 정당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수년째 계속된 집값 상승과 코로나19 사태에 최근에는 물가상승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살림을 맡게 된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실사용하지 않는 모든 부동산 재산을 매각하여 부동산으로 사적이윤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집값 잡는 정책도 활발히 논의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계속적으로 드러내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